

광주 백석산 마륵공원 ‘명품 숲공원’으로 재탄생

민간자본 940억 투입 17만7000㎡ 시민 휴식공간 조성
3.7km 광주 최장 맨발길·모험놀이장·피크닉장 등 갖춰

광주 서구 백석산 일원 마륵근린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명품 숲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마륵근린공원’은 공원 지정이 자동 소멸될 우려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광주 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부지 전체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사업이다.

마륵근린공원은 토지매입비, 공원공사비 등 총 940억원(잠정 집계)을 시비 투입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 완성했다.

약 17만7000㎡(축구장 약 25개)에 이르는 산림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 시민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숲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다.

3.7km에 이르는 산책길은 일반 코스로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용 맨발길도 함께 조성됐다.

이 맨발길은 광주에서 가장 긴 구간이다. 특히 산책길 곳곳에 의자와 세족장, 운동기구, 파고라 등을 배치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초등학교생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발물놀이터(물놀이장), 모험놀이장, 피크닉장 등도 설치해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층 규모의 주차복합건물을 건립해 1~2층은 총 1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3층은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들 시설은 지역 주민과 광주시, 자치구, 시공사가 참여하는 감담회 등을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난 21일 광주 서구 백석산 일원에서 열린 ‘마륵근린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21일 마륵근린공원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마륵근린

공원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위한 명소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도 순

차적으로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리해 시민들이 푸르른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맞손

안전 먹거리 확보 위해 17개 시·도 중 최초 협약

전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른김, 절임배추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국민의 농수산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송성욱 광주지방식약청장, 이재영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장, 김영동 해남군절임배추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마른김, 절임배추, 간마늘, 과메기 등과 같이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공정을 거친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생산업체가 영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 위생 관리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전남도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협약을 체결, 농수산물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해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추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현장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 감 업무협약 체결 지원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홍보 긴밀한 협력 등이다.

단순처리 농수산물 집중지역(전국 대비 약 40%)인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계별(2025~2027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에 대한 점검·평가, 수거·검사, 교육·홍보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로 이어져 농수산물 경제



전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국민의 농수산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했다.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전남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절임배추 업체는 전국의 51.6%, 마른김 업체는 80.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남은 전국 김 생산의 80% 이상, 수출의 36% 이상을 담당하고 있

다”며 “김은 생산·가공·수출 등 단계별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력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동찬 전 의장, 민주당 당대표 특보 임명

“경제·민생 현장 목소리, 당 정책 반영되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사진)을 당대표 특보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선은 지방자치 2.0 시대를 넘어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노사민정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김동찬 특보는 광주시의회 의장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으로서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노사 상생 정책 추진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특보가 지방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 전문성과 경제계와의 소통 능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당대표의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경제 활성화 개혁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김동찬 선임 특보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청대당대표를 보좌해 지역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특

히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경제 정책 역량을 강화해 지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김동찬 특보 임명을 통해 당대표 중심의 정책특보단을 보강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개혁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 ‘당원 주권 강화’ 제도개편 이번주 확정

24일 당무위·28일 중앙위서 당헌·당규개정 의결

당 일각서 “속의 없고 정 대표 연임 의도”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는 물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번 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도부와 당 일각에서 ‘졸속 강행’이라는 비판이 이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당무위원회 토의에 부칠 안건은 ‘당 대표 선출 예비 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호 투표 반영 비율은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모두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도 함께 부의할 예정’이라고 조소래 사무총장이 밝혔다. 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노동계와 취약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중앙당의 각급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략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정책

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조 총장은 전했다.

정청대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지난주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 안건 등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부터 ‘속의 없이 강행하는 것이냐’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 총장은 이에 대해 “1인 1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대의 기구로서 전국 대의원은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자세히 설명됐고, 17개 시도당을 통해 253개 지역위원회에 회람됐다. 최고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도 최고위원 대화방에 이미 하루 전에 검토요청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됐다”고 반박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인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연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지난 전대에서 조직표인 대의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압승했다.

이성오 기자

정준호, 고위층·재벌 병보석 특혜 막는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구속된 피고인의 병보석 특혜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



청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 중이다. 일부 고위층·재벌인사 등이 이를 악용해 수감

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 의원은 “법률안은 임의 병원을 통한 ‘맞춤형 진단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거가 될 것이다”며 “병보석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자체 개발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